

오피니언

光日春秋

박 후 건



중국의 삼국지에서 촉나라의 멸망은 형주의 상실로부터 시작된다. 형주는 삼국의 교차로 역할을 하면서 삼국의 중심, 중심의 역할을 하는 땅이었으며 촉에게 형주의 중요성은 제갈공명의 저 유명한 삼분천하(三分天下) 전략에도 나타난다.

제갈공명은 삼고초려로 자신을 모시려 온 유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주는 북으로 한(漢)과 강이 막고 있어 남해의 이익을 모조리 차지할 수 있습니다. … 장군께서 익주와 형주를 걸터 타고 협한 지세를 이용하여 지키고, 밖으로 손권과 동맹을 맺고 안으로 정사에 힘을 써야 합니다. 천하에 변란이 일어나기를 기다려 삼장에게 형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완성하고 낙양으로 향하게 하고, 장군께서 몸소 익주의 군사를 모아 진천으로 나간다면 대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형주에 본거지를 두고 익주를 공략하였다. 그러나 익주에서 군사 방비를 전사하는 등 고전하는 유비를 구원하러 제갈량이 장비, 조운 등의 장수들과 출병하자 관우 혼자 형주를 방비하게 되었다. 형주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특히

외교가 매우 중요한 땅이다. 삼국이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고 있었던 당시 정세는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연성이다. 그러나 관우는 무신(武神)의 반열에 오른 영웅호걸이었으나 원칙주의자였다. 공명도 이점이 우려되어 서천으로 출병하기

원칙주의와 외교의 유연성

관우에게 글귀를 하나 적어주고 있는데 “북거조조(北拒曹操) 동화손권(東和孫權), 즉 북으로는 조조에 맞서고 동으로는 손권과 화친하라”는 내용이다. 이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우는 손권의 혼사 제의를 ‘범의 딸을 개의 아들에게 주겠느냐’며 사신으로 온 제갈공을 내쫓았다.

관우는 군사들을 이끌고 번성의 조인을 공격했는데 관우의 번성 공격은 온전히 독자적인 군사행동이었다는 것이다. 관우는 오호대장이란 칭호를 달기위하지 않았다. 마초나 황충과 같은 반열에 서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우는 그들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려 번성을 공격하였다.

번성공격의 실패는 부사인과 미방의 배반도 한몫 하였는데 원래 관우는 부하 부사인과 미방을 선봉으로 삼아 번성공격을 계획하지만 부사인과 미방이 실수로 술을 마시다 불을 내어 군량과 마초가 모두 타버리자 관우는 부사인과 미방을 불러내 혹독하게 처벌을 하며 후방에 남겨두었다. 관우의 원칙주의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관우가 보다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였으면, 삼국지는 아마 다시 쓰였을지도 모른다.

중국과 미국 양국은 남북대화→북미대

반도 안정은 ‘소강사회 건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런 연유로 지난 1월에 워싱턴에서 열린 G2 중미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다. 이 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모종의 합의를 보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의 일환으로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은 한국을 설득하여, 즉 힐러리 국무장관의 방한을 통해 그리고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3단계 제재 프로세스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것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 걸고 있기 때문에 3단계 프로세스는 첫 단계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가치관이 전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삼국지 관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교는 원칙을 고집하기 보다는 유연하여야만 국익을 지키고 극대화 할 수 있다. 북한의 진정성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이 되기보다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화의 단절은 서로간의 더 큰 오해와 곡해 그리고 불신만을 낳을 것이며, 한국의 국익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경남대 정의과 부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허 정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인한 의료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이 의료인에게 큰 특혜를 주고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소홀히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난 20여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다.

다행히 이번엔 통과된 법률안의 내용에는 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임의적 조정전처치로 필요에 따라 법원에 직접 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분만 의료사고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등 의료인과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낸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만사지탄의 감은 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 지나친 책임을 물으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피해 가족들의 한계를 넘는 요구 등으로 인해 의료인들은 중환자와 응급환자의 진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법안의 통과를 기점으로 우리 의료인도 더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 피해를 받은 환자나 가족들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끝없는 소송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가 줄어들기 바라는 바이다.

우리 의료인들도 법안 통과를 계기로 직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환자의 생명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환자나 보호자들도 의료 현장에서 기초를 닦으며 진료에 총력을 다하는 의료인들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방어적 진료에 치우치면서 중환자와 응급 환자를 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의사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입장이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도 낭비적으로 해야 하는

등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해졌다. 의대생들도 소위 3D과라는 힘들고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열에 지원하지 않는 등 앞으로 10~20년 후를 책임질 의료인이 양성되지 않아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지난번 삼호 주얼리호 석해군 선장의 총상과 치료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의료는 세계적 수준에 와 있으면서도 직접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외과 전문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 여건이 너무도 낙후되어 있다.

중환자를 진료하면 할수록 병원이 적자상태로 들어가는 잘못된 의료체계 및 의료보합제도야말로 전향적으로 개선시켜 환자들도 마음 놓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보듯 앞으로도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최대한의 공평분배를 찾아내 문제를 해결한다면 국가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 법안 통과에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국민, 국회, 정부, 언론, 법률관계자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우리 의료인들도 국민의 질병과 생명을 지키는데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 <예멘병원장>

기고



김영화

장애인 자활 위해 사회적 일자리 늘려야

많은 장애가 가로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팔팔려 얻은 수입으로 사람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일자리를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은 이 사회에서 배척받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약 20여 년 전에 장애인직업재활을 선도한 시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988년 여수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시작한 여수동백원에서는 개원한 지 2년 후부터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사업을 시작하였다. 1999년부터는 별도의 직업재활시설인 송정인더스트리(여수시 소래면 관가리)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송정인더스트리에서는 여수지역의 특수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이나 재가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다. 현재는 약 35명의 장애인들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버티컬, 플스크린, 로만제이드, 커튼, 실사인테리어 등을 생산하여 관공서, 학교, 가정 등 지역사회 다양한 곳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이 시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인증’,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물인증’을 받아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 시설의 제품은 20여 년의 기술 노하우로 생산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의 관료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

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생산품의 관료확대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진입장벽이 높음을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직업재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의식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 이전에 사회적 책임성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준수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장애인들에게 동등보다는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기회는 다름 아닌 사회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들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도 송정인더스트리 같은 장애인사업장이 많이 생겨서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다. 이러한 장애인사업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보다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

<송정인더스트리 원장>

는 폭죽들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중국산들이었다.

폭죽은 초등학교생들에게도 판매되는 물건

이다 보니 관계당국에서는 품질검사를 좀더 철저히 해줄 바란다.

▲이대웅·여천시 평려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 설

예산 지원 없는 ‘복개천사업’ 제대로 되겠다

환경부가 전국 도시에 있는 복개천천 50곳을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비 지원 없이 공사비의 50~70%만 부담기로 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 ‘청계천 프로젝트’의 전국화를 위한 것이지만 정작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에 따라 수천억 원에 이르는 보상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검토작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광주지역 복개하천은 광주천, 동계천, 용봉천 등 15곳의 하천연장이 129.2km에, 복개구간이 41.8km에 이르고 있으나 보상비가 결핍되어 되면서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동구 지산동에서 계림동까지 5.54km에 이르는 동계천과 서구 양동 광주천 복개구간 3km를 복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택지나 도로, 주차장 등 보상비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복개하천은 생태계 훼손은 물론 수질 악화, 악취 발생 등에 따라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따라서 도시 재생과 환경, 미관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 재정난을 뻔히 알면서도 보상비에 대한 지원 없이 일부 공사비만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뿐인 사업’이나 다름 없다.

지방의 도시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면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순서다. 그럼에도 일방적인 발표를 통해 보상비 등을 지방에 떠넘긴 것은 전시행정이자 탁상행정의 전횡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보상비 전액 지원 등 실현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택지나 도로, 주차장 등 보상비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느닷없는 ‘건보료 폭탄’ 월급쟁이가 봉인가

4월 급여 명세서를 받아든 대부분의 월급쟁이는 아연 실색했다. 건강보험료가 전달에 비해 너무 많이 징수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월급의 일부를 강탈당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072만 명의 추가 부담액으로 확정된 건강보험료는 1조4539억 원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1인당 평균 13만5550 원(월별은 사업주 부담)이 추가 부과된 것으로,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금액이다. 월급쟁이들은 ‘아닌 밤 중에 흉두께’ 식으로 ‘건보료 폭탄’을 맞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정산액이 큰 폭으로 오른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4대 보험통합 등으로 업무 처리가 끝나지 않아 월급 정산일인 25일 이전에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

업무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일제감치 건보료 정산 대상 금액을 확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정산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할 경우 4·27 재보궐 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뒷산’의 지시 때문에 연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월급쟁이들은 각종 물가의 ‘인상 쓰나미’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예기치 않은 건보료 폭탄까지 맞았으니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소득세, 건보료 등으로 ‘응징’하는 등 직장인을 병으로 취급하는 당국의 발상에 분노마저 치솟는다.

건보 재정악화를 이유로 지난 3년 새 건보료는 17.8%나 뛰었다. 그러면서 공무원 건보료는 줄이는 활동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건보정책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봉급 생활자를 병으로 여기는 안이한 건보 정책은 더 명에 불과하다.

無 等 鼓

최근 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목불인견이다. 올 상반기 총 8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는데 과다 집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 이낸싱(PF) 대출 부실과 불법대출 등 대주주의 전횡으로 인한 결과다.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밤 평소 3배가 넘는 예금이 대량으로 인출됐다. 영업정지를 알게 된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친인

인출을 금급원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불법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행태는 ‘고양이에 개 생선을 맡긴 격’이다. 부산저축은행에 관련된 감독관 3명은 16일 오후 8시 50분 “고객이 내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고객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목불인견의 금융권



하지만 예금 인출에 지점에 따라 밤 10시 넘어서 까지 계속됐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 일부 임직원은 친인척의 예금을 무단으로 빼가기도 했다. 대전저축은행에서도 372건, 58억원이

엄격한 법적 처벌과 장기적으로 과유를 통한 인식 전환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최근의 금융권 작태는 금융기관이 돈을 믿고 맡길만한 곳인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마저 들게 한다. 금융권 종사자들은 하루빨리 환골탈태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

이제 장애인들에게 동등보다는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기회는 다름 아닌 사회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들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도 송정인더스트리 같은 장애인사업장이 많이 생겨서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다. 이러한 장애인사업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보다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간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